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2005. 3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2005. 3

전병곤 (동북아연구실 연구위원)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
니다.

목 차

. 문제제기	1
. 주요 내용 및 평가	2
1. 권력승계 완성	2
2. ‘사회주의 조화사회론’ 제시	3
3. 「반국가분열법」 제정	5
. 2005년 대내외정책 방향	9
1. 국내정책 방향	9
2. 대외정책 방향	12
. 정책적 고려사항	16
< 부록 >	18

I. 문제제기

- 중국 헌법상 최고 권력기구인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이하 10기전인대 3차회의)가 전국의 지역별·직능별·민족별 대표 2,988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3.5-14)되어 2005년도 대내외 정책방향을 결정하였음.
 - 국무원의 정부업무보고,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안, 정부예산안 등을 심의·확정함.
- 10기전인대 3차회의에서 장쩌민(江澤民)이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사임함으로써 후진타오(胡錦濤)가 당·정·군의 최고 실권자로서 중국의 대내외 국정운영을 공식적으로 총괄하게 되었음.
- 이번 대회에서 대만에 대한 무력사용을 합법화한 「반국가분열법」이 통과됨에 따라 중국·대만관계는 물론 동북아지역 정세변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본 보고서는 10기전인대 3차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내용들을 검토·평가하고, 2005년도 중국의 대내외정책 방향을 전망하여 우리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하려는데 목적이 있음.

Ⅱ. 주요 내용 및 평가

1. 권력승계 완성

- 이번 대회에서 후진타오가 찬성 2,886표, 반대 6표, 기권 5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에 선출(3.13)됨으로써, 2년 4개월에 걸친 최고지도자의 교체과정이 완결되었음.
 - 후진타오는 중국공산당 16차 당대회(2002.11)에서 당 총서기, 10기 전인대 1차회의(2003.3)에서 국가주석, 중국공산당 16기4중전회(2004.9)에서 당 중앙군사위 주석에 취임하였으나,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은 장쩌민이 유임해왔음.
 - 후진타오의 국가 중앙군사위 주석 승계는 헌법상 최고 권력기관인 전인대를 통해 합법화되었다는 점에서, 제도적인 차원에서 후진타오 체제의 공식 출범을 의미함.

- 국가 중앙군사위 부주석이었던 후진타오의 자리에 당 중앙서기처 서기이자 국가 중앙군사위 위원인 쉬차이호우(徐才厚)가 발탁되고, 국가 중앙군사위 위원에 천빙더(陳炳德), 차오칭천(喬淸晨), 장딩파(張定發), 징즈위안(靖志遠) 등 4명을 새로 충원함.
 - 국가 중앙군사위와 당 중앙군사위는 당과 국가의 기구라는 차이가 있지만, ‘군에 대한 당의 지도(以黨領軍, 黨指揮槍)’ 원칙에 의해 편제 및 인적 구성이 같음.
 - 국가 중앙군사위원회의 인원은 주석 1인, 부주석 3인, 위원 7인 총 11인으로 구성됨(<표> 참조).

< > 가

직 위	성 명	비 고
주 석	胡錦濤(승진)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
부주석	郭伯雄(유임)	
	曹剛川(유임)	국방부장
	徐才厚(승진)	총정치부 주임, 중앙서기처 서기
위 원	梁光烈(유임)	인민해방군 총참모장, 당 중앙위원
	李繼耐(유임)	총장비부 부장, 당 중앙위원
	廖錫龍(유임)	총후근부 부장, 당 중앙위원
	陳炳德(신임)	지난(齊南)군구사령관, 당 중앙위원
	喬清晨(신임)	공군사령관
	張定發(신임)	해군사령관
	靖志遠(신임)	제2포병사령관, 당 중앙위원

-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송자오쭈(宋照肅), 천수이룽(陳秀榕), 윈스 전(聞世震)을 10기전인대 상무위원으로 선출하고, 사임을 표명한 등젠화(董建華) 홍콩 특별행정장관을 대신하여 쟡인취안(曾蔭權)을 직무대리로 승인하였음.

2. ‘사회주의 조화사회론’ 제시

- 후진타오는 이번 대회에서 ‘전면적인 소강사회(小康社會)’의 달성과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새로운 임무로 ‘사회주의 조화사회’의 건립을 강조함.

- 16기4중전회(2004.9)에서 통과된 ‘당의 집권능력 강화에 관한 결정’에서 사회주의 조화사회를 처음 공식 언급한 바 있음.

○ 후진타오가 사회주의 조화사회의 건립을 새로운 국가목표로 제시한 것은 개혁개방정책의 부작용으로 등장한 지역 및 소득격차, ‘삼농(三農)¹⁾’문제, 부정부패, 실업증대, 사회보장체계의 악화 등이 인민의 불만을 야기해 체제안정과 당의 집권적 지위에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결과임.

○ 후진타오는 ‘민주법치·공평정의·성신우애·안정질서·활력이 충만한, 사람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사회주의 조화사회의 건립을 국정전반에 관철시키려고 노력할 것임.

- 사회주의 조화사회의 건립은 사회주의물질문명·사회주의정치문명·사회주의정신문명의 건설에 유리한 사회조건을 창출하는 것으로서,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기존 정치·경제·문화의 ‘삼위일체’에 사회를 추가해 ‘사위일체’로 확대한 것임.

○ ‘사회주의 조화사회론’은 ‘이민위본(以民爲本)’의 철학과 ‘과학적 발전관’을 바탕으로 한 안정과 발전의 조화가 핵심이며, 향후 후진타오의 통치이념으로 기능할 것임.

- 후진타오는 ‘권력은 인민을 위해 쓰고, 인정은 인민을 위해 쏟고, 이익은 인민을 위해 도모한다(權爲民所用, 情爲民所系, 利爲民所謀)’는 신삼민주의(新三民主義)의 제기를 통해 자신만의 통치철학을 모색해왔음.

1) ‘삼농(三農)’이란 농촌, 농민, 농업을 지칭하며, 중국인구의 7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소외지역으로서 이들의 증대하는 불만과 시위가 중국사회의 주요 불안 요인이 됨.

3. 「반국가분열법」의 제정

- 이번 대회는 10기전인대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2004.12.29)에서 통과된 「반국가분열법(초안)」을 심의한 후 총 10개조로 구성된 「반국가분열법」을 찬성 2,896표, 기권 2표로 통과시켰음.

가. 요지

(1) 입법 목적 및 적용 범위(1조)

- 대만독립의 분열세력이 국가를 분열시키는 것을 견제하여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고, 대만해협 지역의 평화와 안정·국가주권과 영토의 보존·중화민족의 근본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하였다고 규정함.

(2) 대만문제의 성격(2-4조)

- ‘하나의 중국(一個中國)’ 원칙에 의거해 대만문제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함.
 -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으로서 중국은 대만독립의 분열세력이 어떤 명의(名義)와 방식으로도든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 대만문제는 중국내전의 산물이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의 내정이며,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외국세력의 간섭도 받지 않음.

-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성하는 것은 대만동포를 포함해 전체 중국인민의 신성한 의무임.

(3) 평화통일의 실현(5-7조)

- 평화통일과 ‘일국양제(一國兩制)’의 방침을 규정하고 있음.
 - 하나의 중국원칙은 국가통일을 실현하는 기초이며, 평화통일은 대만해협 양안동포의 근본이익에 가장 부합함.
 - 중국은 최대의 성의와 노력을 기울여 평화통일을 실현하며, 통일 이후 대만은 대륙과 다른 제도와 고도의 자치를 실행할 수 있음.
- 양안의 공동번영 및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양안 인원의 왕래에 의한 상호 이해와 신뢰 증진 도모
 - 양안의 경제교류·협력 강화와 직접 ‘삼통(三通: 通郵, 通航, 通商)’의 추진
 -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교류의 추진
 - 범죄에 대한 공동대처
 - 대만해협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양안관계의 발전에 유리한 기타 활동.
-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중국은 대화의 방식·절차·내용에 상관없이 대만과 평등한 대화를 진행할 것임.
 - 대화의 내용으로는 양안 적대상태의 공식 종결, 양안관계 발전계획, 평화통일의 절차, 대만당국의 정치적 지위, 대만의 국제사회에서의 활동 공간, 기타 평화통일 실현과 관련된 모든 문제 등을 포함하고 있음.

(4) 국가분열을 저지하기 위한 비평화적 방식 규정(8-9조)

- 비평화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3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 대만독립 세력이 어떠한 명목과 방식으로든 대만의 분열을 조성할 경우
 - 대만이 중국에서 분열할 수 있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 평화통일의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될 경우
- 비평화적 방식 및 기타 필요한 조치는 국무원과 중앙군사위가 결정하고 실시한 후 즉시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보고함.
- 비평화적 방식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사용할 때는 대만동포와 대만에 있는 외국인의 생명·재산·기타 권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중국 내에 있는 대만동포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함.

나. 평가

- 이번 대회에서 통과된 「반국가분열법」은 대만 민진당 정부가 추진해온 대만의 법적 독립시도에 대응하여 이를 저지하고 기존의 대만정책을 합법화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
 - 대만의 천수이볜(陳水扁) 총통은 국명을 개정하려는 정명(正名)운동을 전개하며 ‘2006년 신헌법제정→2008년 건국’이란 독립시간표를 제시한 바 있음.
- 중국이 법의 명칭으로 ‘통일’이라는 용어 대신 ‘반국가분열’을 사용한 이유는, 중국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이기 때문에 대만과 대륙

에는 통일문제가 존재하지 않으며 반분열의 문제만 존재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임.

- 대만문제에 대해 ‘무력사용을 배제하지 않는다(不放棄武力)’는 기존 표현을 ‘비평화적 방식(非和平方式)’으로 수정하였는바, 이는 무력행사를 포함해 경제제재·해협봉쇄·외교적 수단 등을 동원해 대만독립을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임.
 - 비평화적 방식의 시행절차를 ‘선 실시·후 보고’ 체계로 규정한 것도 무력사용의 신속성 및 현실성을 제고시킨 것으로 평가됨.
- 「반국가분열법」은 직접적으로는 대만의 독립 세력을 겨냥하고 있으나, 대내외적으로는 신장(新疆)과 시짱(西藏)의 독립활동과 미국의 국내법인 「대만관계법」에도 대응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음.
 - 달라이라마는 시짱의 분리독립을 포기한다는 선언(3.10)을 했음.
 - 미국은 1979년 대만과 단교할 당시 ‘대만에 대한 어떤 군사행동에 대해서도 이에 저항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명시한 대만관계법을 통과시켰음.

Ⅲ. 대내외정책 방향

1. 국내정책 방향

가. 정책기조

- ‘사회주의 조화사회’의 이념에 따라 균형발전과 안정단결에 중점을 두고 낙후한 지역과 빈곤계층에 대한 관리와 지원을 확대하는 국내정책을 추진할 것임.
 - 식품안전·주택·의료보장·교육·취업 등 서민을 위한 정책과 관리제도에 대한 개혁에 중점이 두어질 전망이다.
 - 또한 ‘일국양제’의 실험장인 홍콩 및 마카오 특별행정구와의 교류 협력을 강화해 이 지역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도할 것임.
- 중국공산당은 체제의 안정과 국민통합을 위한 수단으로써 민족주의 정서를 이용한 애국주의교육운동을 전개할 것임.
 - 중국의 통일전선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3.3-12)에서 항일전쟁 시기의 남경대학살과 9·18 만주사변 등을 국치일로 제정해 대규모의 애국주의교육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의한 바 있음.

나. 정치개혁

- 이번 대회를 통해 권력기반을 공고히 한 후진타오 주석은 당-국가(party-state)체제의 안정을 위한 과제로 사회주의 조화사회의 건립을 향한 ‘의법치국(依法治國)’과 사회주의법치국가의 건설과 같은 정치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측됨.

- 이번 대회에서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안’과 ‘정부예산안’ 등의 보고·심의 방식을 기존의 구두보고·심의 방식에서 인민대표에게 직접 서면보고·심의하는 방식으로 개혁한 바 있음.
- 법에 의한 경제관리 방식 및 공정사회 구축을 위해 행정능력을 강화하는 법치정부의 건설을 추진할 예정임.

- 그러나 법과 제도에 의한 ‘공식정치(formal politics)’의 영역과 개인의 권위나 판시(關係)에 의해 이루어지는 ‘비공식적 정치(informal politics)’의 영역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국정치의 특성상, 정치개혁은 제한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임.
 - 공산당 지배체제의 장기적 유지를 목표로 인민의 불만을 제도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 경제정책

- 사회주의 조화사회의 실현을 위해 성장과 분배의 조화를 달성하려는 방향으로 거시경제에 대한 조정정책이 추진될 것임.
 - 올해는 10차 5개년계획(2001-2005)을 완성시키는 해이자 11차 5개년계획을 준비하는 해로서, 안정적인 경제성장 정책을 추진할 것임.
 - 이를 위해 GDP 목표를 8%로 하향 조정하고, 실업률을 4.6% 내에서, 소비자가격 상승률을 4% 내에서 억제하려는 목표를 세웠음.
- 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낙후한 지역인 서부와 동북지역의 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특히 중부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예정임.

- ‘삼농’문제의 해결을 위해 529개 현의 농업세와 전국의 목업세를 면제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중앙재정 150억 위안을 증액 지출할 계획임.
- 교육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해 올해 빈곤가정 학생의 교과서비와 잡비를 면제하고 기숙사 및 생활비를 보조할 예정이며, 2007년까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임.
- 한편,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의 이미지 구축을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양허안에 따른 관세 인하 및 비관세장벽 철폐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인민폐 환율 및 금융체제에 대한 개혁도 중국 및 주변국가의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는 수준에서 개혁할 것으로 예측됨.

라. 국방정책

- 군대의 정규화와 해·공군을 중심으로 한 군 현대화를 추진해 군에 대한 통솔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국가 중앙군사위원회에 새로 충원된 차오칭천 위원과 장딩파 위원이 공군과 해군사령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해·공군의 전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군 현대화 정책이 수행될 것임.
 - 군 정보화 능력제고, 군 장비 현대화, 군대 정규화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 2005년도 국방예산 12.6%를 증액한 바 있음.

2. 대외정책 방향

가. 정책기조

- 10기전인대 제3차회의에서 「반국가분열법」 이외에 중국의 대외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결정은 없었는 바, 경제발전에 유리한 주변환경을 조성하려는 기존 대외정책의 기조는 지속될 것임.
 - 즉, 종합국력의 신장에 유리한 평화적인 국제환경을 조성하고 국력에 상응하는 국제적 위상을 확보하되, 책임 있는 강대국의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중국의 부상에 대한 주변국의 위협인식을 완화시키고자 함.
 - ‘평화적인 부상(和平崛起)’의 공식적 언급을 자제하는 한편, 국제기구나 다자외교에의 참여는 강화할 것임.
- 국가주권과 영토수호 차원에서 심혈을 기울여왔던 「반국가분열법」이 통과된 바, 향후 이 법안의 합법성과 당위성을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지지를 얻으려는 행보가 본격화될 것임.
 - 러시아·북한·파키스탄 등이 지지를 표명했음.
 - 반면, 미국·일본·유럽 등은 반대를 표명했음.

나. 대미정책

- 10기전인대 제3차회의에서 후진타오의 권력이 강화되었고 미국도 부시가 재집권하였기 때문에 중국 대외정책의 핵심 축인 대미정책은 기존의 협력적인 외교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임.

-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을 완화시키고 미국과 기존에 유지했던 테러와의 전쟁, 북핵문제에서의 협조, 유엔과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등은 지속될 것임.
- 그러나 「반국가분열법」의 통과로 대만문제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에서 미국과의 갈등은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미국은 「반국가분열법」이 ‘대만해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 지역의 현상을 저해하는 어떠한 시도도 반대한다’고 공식 표명(3.14)하였음.
 - 중국은 테러와의 전쟁 이후 미국의 대중봉쇄정책을 경계해왔으며, 특히 북핵문제, 미·일동맹의 강화,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등을 대만문제와 연동하여 위협으로 간주해왔음.
- 따라서 중국은 미국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해협력기구(SCO)를 통한 중앙아시아 국가와 아세안(ASEAN) 및 인도 등과의 경제·안보 협력도 증진시키려고 노력할 것임.

다. 대일정책

- 대일정책은 경제무역 분야에서의 협력과 정치 분야에서의 경쟁이 공존하는 가운데, 「반국가분열법」의 영향으로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항일 승전 60주년을 기념한 애국주의교육운동을 전개할 예정인바, 반일 민족주의 정서는 고조될 것임.

- 중국은 일본의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해왔으며, 미·일동맹의 강화로 확대된 일본자위대의 역할을 대만문제에 대한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고 있음.
- 전인대 직후 온자바오(溫家寶)총리는 관계개선의 3원칙으로 ‘과거사문제의 성의 있는 처리·대만문제 불개입·경제교류협력의 강화’ 등을 제시했는 바, 중일관계가 조기에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지 않음.
 -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지속되는 한 양국정상의 상호방문 및 회담은 성사되기 어려움.

라. 대러정책

- 미국의 세계패권질서를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됨.
 - 미·일의 외교·국방장관간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회담, 2.20)에서 강화된 미일동맹에 대응하여 러시아와 합동군사훈련을 계획(9월 예정)하고 있음.
 - 중·러간 합의한 경제무역과 에너지 협력방안(2004.9.24)을 구체화시켜 나갈 것임.

마. 대만정책

- 대만정책은 기존의 정책을 계승해 후진타오가 제시(3.4)한 ‘새로운 형세 하에 양안관계 발전에 대한 4가지 의견(胡四点)’과 그것을 입법화한 「반국가분열법」의 틀 내에서 전개될 것임.

- ‘호사점(胡四点)’의 핵심은 ‘하나의 중국원칙 견지·평화통일·대만인민의 희망에 부응·대만독립의 분열활동에 대한 반대와 불타협’으로 요약됨.
- 그러나 「반국가분열법」이 전쟁을 합법화한 것이 아님을 국제사회에 보여주기 위해 경제교류·협력을 중심으로 한 유화책을 전개할 것임.
 - 온자바오 총리는 대회 직후, 양안직항의 상설화·대만농산품의 중국판매 허용·어업노동자의 대만수출 등을 제의(3.14)했음.
- 대만의 집권당인 민진당이 「반국가분열법」의 통과에 강경대응을 전개할 경우, 양안관계는 당분간 교착 및 경색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도 있음.
 - 대만은 국제사회에 이 법안의 비평화성을 호소하는 한편, 100만명이 참가하는 반국가분열법 반대 시위(3.26)도 계획하고 있음.
 - 대만은 중국의 무력사용에 대비 180억달러 상당의 첨단무기 구매와 ‘한광(漢光)21’의 군사훈련을 추진할 계획임.
- 그러나 대만이 중국에 무력사용의 빌미를 허용하지 않기 위해서 대만독립 시도를 진행하지 않고 중국과의 대화를 시도할 경우, 중국의 대만정책은 현상유지정책이 지속될 것임.

IV. 정책적 고려사항

- 10기전인대 3차회의의 결과가 중국의 기존 한반도정책 기조인 한반도 비핵화 원칙, 평화와 안정의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임.

- 다만, 북한의 핵보유 선언(2.10) 이후 중국 외교부 대변인인 류젠차오(劉建超)가 기자회견(3.3) 시 ‘무핵화(無核化)’라는 용어를 사용한 점은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감지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중국은 북핵문제를 미국의 대중경제와 대만문제의 연장선상에서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북핵문제에서 미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을 것임.

- 10기전인대 3차회의에서 통과된 「반국가분열법」으로 인해 동북아에서 대만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미·일간의 갈등 전개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대비해야 함.
 -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 등의 수단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는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위해 중·미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협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전략적·균형적 접근이 필요함.

-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 고조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 대만문제는 중국의 내정문제이며 주한미군의 대만문제 개입을 반대하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임을 중국에 인식시킬 필요가 있음.

- 북한이 이례적으로 「반국가분열법」에 대한 공식적 지지를 표명(3.7)하는 등 북·중관계의 발전 가능성이 있는 바,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핵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이 우리의 일관된 입장임을 중국에 전달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의 박봉주 내각 총리의 중국방문(3.26)도 예정되어 있음.

- 향후 중국의 대만정책이 「반국가분열법」이라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을 고려하여 대중국, 대대만 관계를 융통성 있게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에는 대만해협의 안정·평화통일과 한반도의 안정·평화통일이 양국의 공동관심사임을 표명함.
 - 대만과는 민간 및 경제부문에서의 교류를 중심으로 관계를 유지해야 함.

< 부록 >

「반국가분열법」 전문

2005년 3월 14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 통과

제1조 대만독립의 분열세력이 국가를 분열하는 것을 반대·저지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며, 대만해협 지역의 평화와 안정·국가주권과 영토보전·중화민족의 근본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세계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존재하며 대륙과 대만은 하나의 중국에 속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는 보존되어야 하며 분할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국가주권과 영토보존을 수호하는 것은 대만동포를 포함해 전체 중국인민의 공동의무이다.

제3조 대만문제는 중국내전의 산물이다. 대만문제를 해결하고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중국의 내정이며, 어떤 외국세력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4조 조국통일의 대업을 완성하는 것은 대만동포를 포함해 전체 중국인민의 신성한 직책이다.

제5조 하나의 중국원칙을 견지하는 것은 조국의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기초이다. 평화방식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대만해협 양안동포의 근본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다. 국가는 최대의 성의로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 평화통일을 실현한다. 국가의

평화통일 후 대만은 대륙과 다른 제도와 고도의 자치를 실행할 수 있다.

제6조 국가는 아래의 조치를 취해 대만해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양안관계의 발전을 이룬다:

- (1) 양안인원의 왕래를 격려, 촉진시켜 이해를 증진시키고 상호 신뢰를 증강시킨다
 - (2) 양안의 경제교류와 협력 및 직접 통우(通郵)·통항(通航)·통상(通商)을 격려, 촉진시켜 양안의 경제관계를 밀접하게 하고 호리호혜(互利互惠)를 이룬다.
 - (3) 양안의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교류를 격려, 촉진시켜 중화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공동으로 발양한다.
 - (4) 양안의 공동 범죄단속을 격려, 촉진시킨다.
 - (5) 대만해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양안관계를 발전시키는데 유리한 기타 활동을 격려, 촉진시킨다.
- 국가는 법에 의거하여 대만동포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제7조 국가는 대만해협 양안의 평등한 협상과 담판을 통해 평화통일을 실현할 것을 주장한다. 협상과 담판은 절차와 단계를 나누어 진행하며 방식은 다양한 형태로 할 수 있다.

대만해협 양안은 아래사항에 대해 협상과 담판을 진행할 수 있다:

- (1) 양안의 적대상태를 정식 종결함;
- (2) 양안관계의 발전계획;
- (3) 평화통일의 절차와 안배;
- (4) 대만당국의 정치적 지위;

- (5)대만지역의 국제적 및 기타 지위에 상응하는 활동공간;
- (6)평화통일 실현과 관련된 기타 모든 문제

제8조 대만독립의 분열세력이 어떤 명목과 방식으로든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하는 사실을 조성할 경우, 대만을 중국에서 분열할 수 있는 중대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평화통일 가능성이 완전히 상실할 경우 국가는 비평화적 방식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 국가주권과 영토의 보존을 보위한다.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평화적 방식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시에는 국무원·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을 거쳐 실시하며, 즉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본 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평화적 방식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시에 국가는 대만주민과 대만에 있는 외국인의 생명 및 재산의 안전과 기타 정당한 권익을 가능한 최대로 보호하고 손실을 감소시킨다. 동시에 국가는 법에 의거 중국의 기타 지역에 있는 대만동포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10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최근 발간자료 안내

연구총서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5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숭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현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향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에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 ~ 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최의철·이우영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최의철·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학술회의총서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번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과 한·중 협력	9,000원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협동연구총서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제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1)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1)	김광억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억	저	4,5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시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II):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진행 동향 평가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Studies Series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가
가

定期會員 가

定期會員制

(

」)

1.

- 1) :
- 2) :
- 3) :

2. 가 가

- 1) 가 : ① 가 入金證
Fax
② (<http://www.kinu.or.kr>) 가
Fax

- 2) : 가 1
(20 , 10 , 7)

- 3) : 310-05-006298(:)

- 4) 가 : 1 .(가)

3.

- 1)
- 2) 「 」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30-35),
(5-6), (5-10)

- 3) , 가
- 4) 50% 가
- 5) DB 3

4. 가

6 535-353 (:142-076)
(:901-2559, 901-2529 FAX:901-2547)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통일정세분석 2005-06

발행처	통 일 연 구 원
편집인	통일연구원 동북아연구실 서울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전화 : 901-2527(代), 팩스 : 901-2543
인쇄처	도서출판 늘 품 전화 : 336-5326
인쇄일	2005년 3월 일
발행일	2005년 3월 일
